

# 행정도시 지속추진 범국민대회

- ◆ 일시 : 2005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 ◆ 장소 : 서울 종묘공원

## 행정도시 지속추진 범국민대회 준비위

301-825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1층 전화 042-331-0092 전승 042-252-6976(범대전시민연대)  
301-825 대전시 중구 선화동 348-5 전화 042-255-9008 전승 042-255-9401(범충남도민연대)  
361-845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710-18 수경빌딩 4층 전화 043-263-8006 전승 043-263-8007(범충북도민연대)

# 행 사 일 정

시간	순 서	내 용
09:30	집 합	대전/충남/충북
10:00	출 발	
13:00	도 착	중식(이동하면서) 및 서울시내 일원 도착
13:30	가두홍보	서울도심 가두홍보
14:00~15:00	펼기대회	<p>행정도시 지속추진 범국민대회 사회 : 노민호/ 박정현</p> <p>14:10 개회사 - 한창숙 범충남도민연대 상임대표</p> <p>14:17 대회사 - 박연석 범충북도민연대 상임대표</p> <p>14:24 '행정도시 지속추진의 당위성' -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p> <p>14:31 '행정도시와 국가균형발전' - 이민원 광주대 교수</p> <p>14:38 '행정도시 국민투표론의 허구성 규탄' -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p> <p>14:45 식발식</p> <p>14:55 결의문 낭독 - 황순덕 연기군비대위 상임대표</p>
15:00	행 진	종묘공원 ~ 광화문
16:00	서울출발	집회종료(광화문)
20:00	도 착	각 집합지별 도착
20:10	해 산	대전/충남/충북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또다시 거꾸로 돌리려 하는 일부 집단에 의해 제출된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앞두고 비통함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지난 40여년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요원하기만 한 일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바로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리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였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였던 국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혹한 겨울 우리는 전국 곳곳을 누비며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신속한 신행정수도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국회는 신행정수도보다 미흡한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기 위해 우리는 행정도시특별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 일부 세력은 행정도시특별법마저 위헌소송을 제기하더니, 일부 보수언론과 합세하여 행정도시가 수도권할인양 사실을 호도하며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미흡하기 이를 데 없는 행정도시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던 우리는 편협한 수도권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일부 집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심각한 우려와 환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 요소이며,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연기공주로의 행정부처 일부이전이 위헌이라면, 과천청사도 위헌이란 말인가?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여 헌법적 절차를 정략적으로 남용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수도권분할론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나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을 좌절시키려는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반균형발전 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정도시에 대해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와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국민투표 주장은 행정도시가 수도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도시는 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논리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 외교·국방·통일 등의 주요부처는 서울에 잔류하고, 중앙의 일부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결코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중요정책에 대해 '필수적'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원리로서의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심각한 국가혼란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의 삼권분립의 정신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체제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왜곡된 정략적 주장으로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도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전형적인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선고할 것이라 확신한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며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으나,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보다 미흡한 행정도시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합헌결정을 당연히 기대한다. 행정도시가 위헌이고, 국민투표 대상이라면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처참히 무너지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체제의 존립근거의 상실로 인한 국가대공황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행정도시특별법이 또다시 비상식적 결정에 의해 좌절된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전면투쟁, 전면봉기이다. 우리의 인내와 울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정도시 합헌결정을 기대하며, 우리는 합헌결정과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5년 10월 20일

행정도시 지속추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